

데스크시각

김우성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의 '생활가전 해외이전' 발언으로 광주·전남지역이 온통 시끄럽다. 협력업체들은 긴급 대책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도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시민들의 해석도 '사업의 재배치나, 완전 해외이전이나' 등 분분하다.

삼성광주전자 책임자가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구심과 우려는 여전하다. 지역민들의 우려는 그룹의 최고 책임자가 언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삼성광주전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삼성광주전자가 광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민의 기대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회장 발언에 지역사회 촉각

2006년 기준 삼성광주전자 외형은 매출 3조1천억원, 생산유발효과 9천600억원, 고용창출효과 1만2천400명 등으로 광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

삼성전자 '광주 로드맵' 내놓아야

촉발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음일까, 채동석 삼성광주전자 부사장은 지난 12일 제계와 광주시 등을 방문,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3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광주는 생활가전의 중심으로 정했다"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은 광주에서 생산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부가가치 높은 프리미엄급 생활가전 광주 생산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광주전자 매출

에 변화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뭔가 말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룹 차원의 해명을 바라고 있다.

이 회장의 발언은 결국 이윤 추구를 생명으로 하는 기업 논리에서 출발한다.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문은 지난 2002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2003년 1천100억원, 2004년 500억원, 2005년 900억원, 2006년 1천800억원 등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부문을 제외한 삼성광주전자 경영만 따질 경우 지난해 390억원의 흑자

를 냈다고는 하나 기업하는 입장에서 생활가전 전체의 계속되는 적자를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은 요즘 기업경영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책임 또한 소홀해서는 안된다. 삼성은 수원에 있던 생활가전라인을 지난 2004년 나주지역의 대명사인 광주로 이전,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다. 채 부사장이 강조한 삼성의 지역균형발전전략도 이런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수립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세계 일류를 추구하는 기업, 삼성이 생활가전라인을 통해 '광주경제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 제품 사주기 나서야

광주시는 삼성광주전자가 광주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광주전자의 성장과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 삼성광주전자 스스로도 생활가전라인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광주시민과 재계, 지역사회도 '광주전자 제품 사주기 운동' 등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광주시민들과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를 비롯한 경제계는 삼성의 생활가전 라인 이전 문제를 놓고 가슴을 졸이고 있다. 광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애 더욱 그렇다.

이제 삼성이 광주시민들의 갈망에 화답할 차례다. 이 회장의 발언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그룹 차원에서 삼성광주전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로드맵'을 내놓아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길 바란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정신에 걸맞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

<경제부장>wskim@kwangju.co.kr

시설

광주 불법 주·정차 '몸살' 이대론 안 된다

광주 시내 전 지역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난잡한 풍경이다.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물론 주요 간선도로, 심지어 교차로에까지 하루종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버스 터미널과 재래시장, 백화점 등 통행이 잦은 지역은 아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뒤덮여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듯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뒷집만 지고 있는 당국은 무슨 배짱인지 묻고 싶다. 과연 이리하고도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

올 들어 광주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1~2월 2개월 동안 견인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5천94대에 달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겨우 26대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단속권이 있는 각 구청이 인원 및 예산부족을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도시공사가 올해부

터 적자를 이유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각 구청으로 환원하면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차단속을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표 감소로 생각하는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사고 방식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시민불편은 물론 물류 방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주차문제에는 이제 단순한 주차 수요와 공급의 차원을 넘어 토지이용과 도로망 체계 등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장 기초적인 단속업무를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광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시차의 주차단속 포기는 공권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미도를 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혼자만 편하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일그러진 사고 방식도 고쳐야 함은 물론이다.

노 대통령 FTA 발언 농산물 희생 없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새로 한 지침을 제시했다. 한미간에 8차 협상이 끝난 지 하룻만이다. 오는 19일 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등 핵심장점에 대해 막판 타협을 하는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협상실무팀에게 경제적 문제는 고려하지 말고 경제적 실의만 따질 것을 주문했다. 또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에 쫓길 필요가 없고 높은 수준 대신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이 한미 FTA의 협상원칙과 시한, 합의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조기타결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 것으로 보인다. '반대가 예측했던 수준을 넘지 않았다'거나 '협상팀이 반대진영의 정치적 목소리에 끌려가지 말라'는 등의 발언에서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지침은 막판 타협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

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주목되는 발언은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는 대목이다. 장사꾼의 논리는 명분보다는 실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고위급회담에 선 실무적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주고받기식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빅딜'인 것이다.

'빅딜'이 성사되면 농산물시장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쌀시장 개방 등 농산물 분야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측 농업분야 협상팀은 8차 협상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측 협상팀과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협상을 서둘러선 안된다. FTA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 해도 쌀 등 농산물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나서 농업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평칼럼



최희동

얼마 전 전셋집에서 사는 한 할머니의 선행이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서울시 양천구 박영자 할머니(84세)는 매달 33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검소한 생활로 모은 돈 일천만원을 자기보다 더 불우한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다고 한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기부할 돈으로 조금 더 넓은 방으로 전세를 옮길 것을 권했으나 '이 방에 정이 들어 옮기기가 싫다'는 결연의 말씀을 하여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정작 문제는 나라의 지도자 중에서는 박할머니와 같은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지도자들이 그렇다. 선거철만 되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고



이정호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업부지가 3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문화재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발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문화재를 조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다소 이러한 문화재조사를 대학이나 국립박물관, 국립연구소에서 담당하였으나 개발사업과 함께 문화재조사가 늘어나면서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문화재 조사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현재 문화재조사사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대행하여 문화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계획되면서 전국적인

정치인과 봉사(service)

사람, 여기저기서 자원봉사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다가 선거철이 끝나면 봉사라는 말까지 실종된다.

그러다가도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재해현장이 생기면 어김없이 또 나타나 다음 선거를 위한 사전만 찍고 돌아간다. 재해현장마다 오죽하면 높은 사람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왔을까.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은 말뿐 마음은 잿밥에만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의원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선출직의 역할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자임하고 나선 정치지도자들의 미담은 없는가? 금년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많은 대권주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 역시 이벤트성 행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이 최소한 매달 한 번 정도는 정성이 담긴 자원봉사를 했으면 한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 서민 불우한 이들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다. 말로만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이다.

민생정치를 하겠다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속빈 강정과도 같다. 이제는 봉사를 말로만 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사회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구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후보들부터 지금까지 어떤 봉사를 해왔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자.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지도자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2006년 6월 수상자

'은평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평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농기계 제조 일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기했으면

얼마전 대리점에서 중고 트랙터를 고르다가 언제 만든 제품인지 알 수 없어 물어봤더니 대리점 직원이 'xxxA00172x'라고 적힌 문구를 보여주며 A가 2000년도에 만들었다는 표시라고 했다.

구입하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2000년 제조'라고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어렵게 표시를 했을까. 농기계 제조 일자를 일부러 암호처럼 함

들게 표시해놓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가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기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노인들만 있는 농촌 마을도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제조 일자 등을 표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면 쉽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일락·보성군 문덕면

문화재 발굴 기관의 현실

대규모 문화재조사가 예상되고 있다. 그 면적만 수천만 평에 이른다. 학계에서는 개발사업 기간 중에 문화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일찍 접었다. 지금도 모든 기관이 문화재조사에 매달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는 탄식만 들린다.

문화재로 인한 개발사업자의 고통도 극심하다.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지역에서 중요한 문화재라도 발견되면 유적조사가 수차례 연장될 수밖에 없다. 문화재를 조사하는 동안 사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일까지 생긴다.

경계논리로 본다면 문화재조사가 폭증하는 것은 곧 호황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연구자가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문도 있다.

불임부부 위한 정책 좀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결혼한 지 9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친구가 정부가 지원해주는 불임 시술을 신청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문했다가 돌아왔다. 1인당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돼 겨우 1회 시술 비용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소득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서류 준비에 만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밀한 사생활인 불임 문제 때문에 신청서류를 떼려 다녀야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수치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조금만 수혜자들의 입장을 배려하

면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시술비 지원 요건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접수기관을 보건소 대신 전국민의 소득 및 재산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면 윈윈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불임시술 지원 횟수를 늘려주는 것으로 불임부부들의 아이 갖기 희망을 키워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기존 정책의 손질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김경자·순천시 안동동

無等鼓

한국과 대만 야구팬들 모두 지난해 열렸던 도하아시안게임 야구경기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팬들엔 참변이었다. 11월 30일 2-4로 대만에 패배하자 한국야구에 조종이 뒤흔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우리와 게임도 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던 대만에 패한 것은 야구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아시안게임 9개월 전에 열렸던 야구월드컵(WBC)에서 일본과 미국을 격파해 세계정상급 실력을 인정받은 감격까지 맛본 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모였다.

반면에 대만은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의기양양했다. 당시 한국야구를 치욕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왼손잡이 투수 귀홍즈(25·LA다저스)다. 선발등판한 그는 제구력이 불안하다는 평가와 달리 5회까지 1실점으로 선방했다. 그의 호투로 무릎 꿇은 한국선수들은 그날부터 귀국할 때까지 선수촌 밖 한식당을 찾을 엄지가 없어 '한국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경제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자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스포츠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